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8월 30일(목)에 배포되었습니다.

양육미혼모 지원방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논의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8월 30일(목)

보도 날짜 : 2012년 8월 30일(목)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자료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김 혜 영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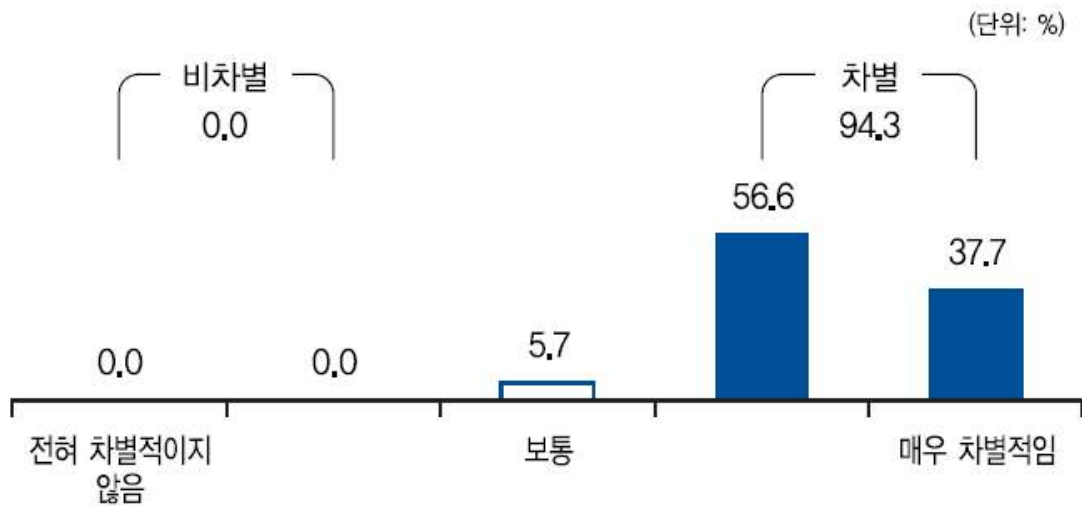
(연락처: 02-3156-7106, 이메일: flash89@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논의 등과 관련하여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8일 간, 관련분야 전문가 총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차별 있어

☐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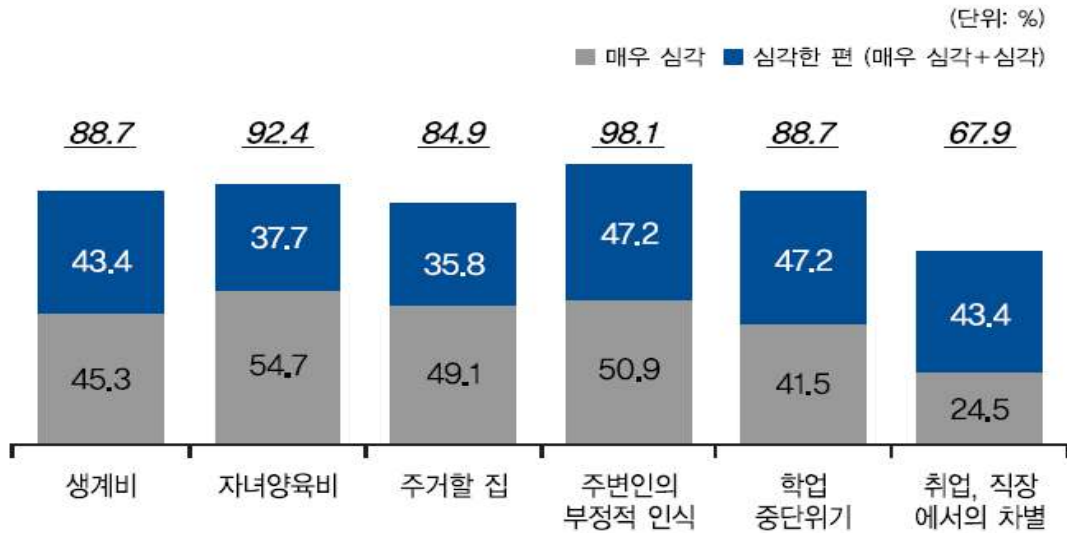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94.3% (매우 차별 37.7% +
차별 56.6%)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함,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한사람도 없음.



<그림 1. 미혼모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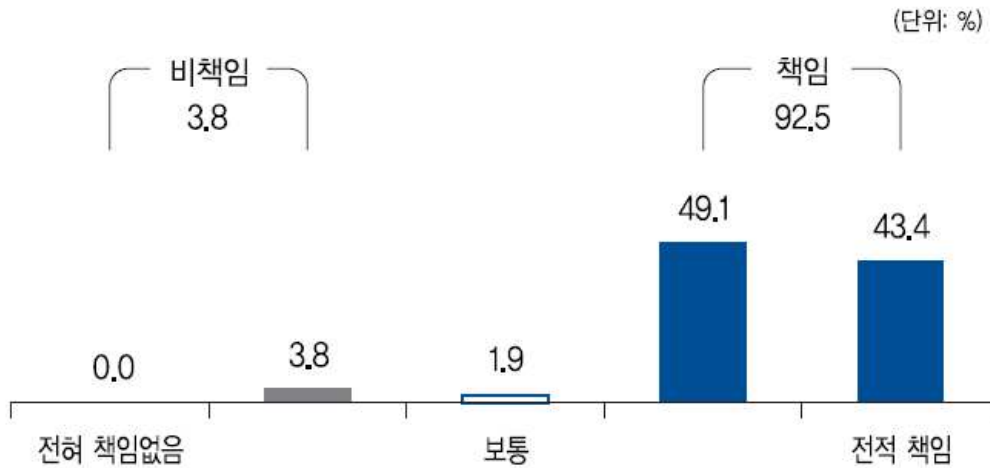
-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98.1%(매우 심각 54.7% + 심각 37.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미혼모 당사자의 문제를 볼 때, 심각하다(매우 심각 + 심각한 편)는 응답률은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 98.1%, ‘자녀양육비’ 92.4%, ‘생계비’ 88.7%, ‘학업 중단 위기’ 88.7%, ‘주거할 집’ 84.9%, ‘취업, 직장에서의 차별’ 67.9% 순으로 나타남. ‘매우 심각’의 응답률만을 비교할 때 ‘자녀양육비’와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남.



<그림 2.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자녀양육비, 미혼부 책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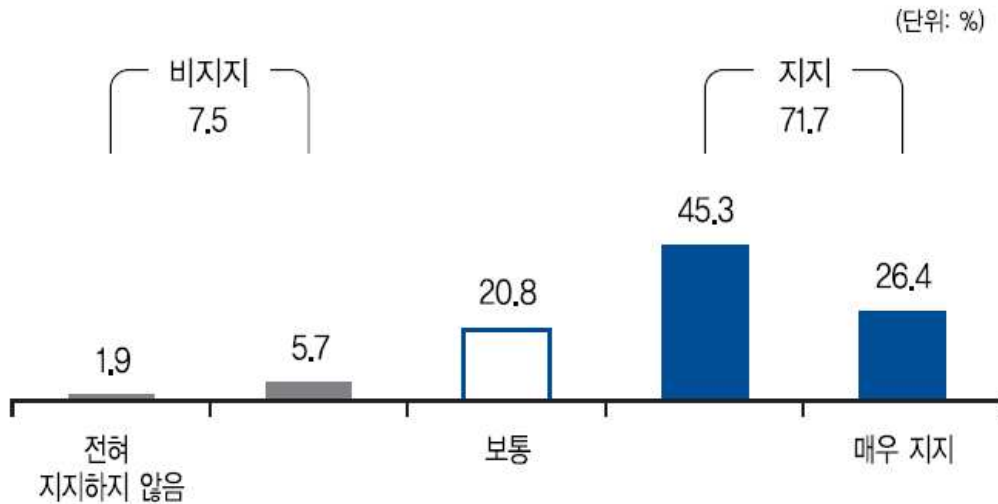
-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
-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조사응답자의 43.4%는 ‘전적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9.1%는 ‘책임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
 -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2.5%에 이르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8%임.



<그림 3.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강화 위해 정부조직 및 인력 확대 자녀양육비의 국가 대지급 검토 필요

- ☐ 자녀양육비 이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인력을 확대와 국가의 대지급도 검토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로서 정부 조직 및 인력 확대 의견
 -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인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응답자의 71.7%(매우지지 26.4% +지지 4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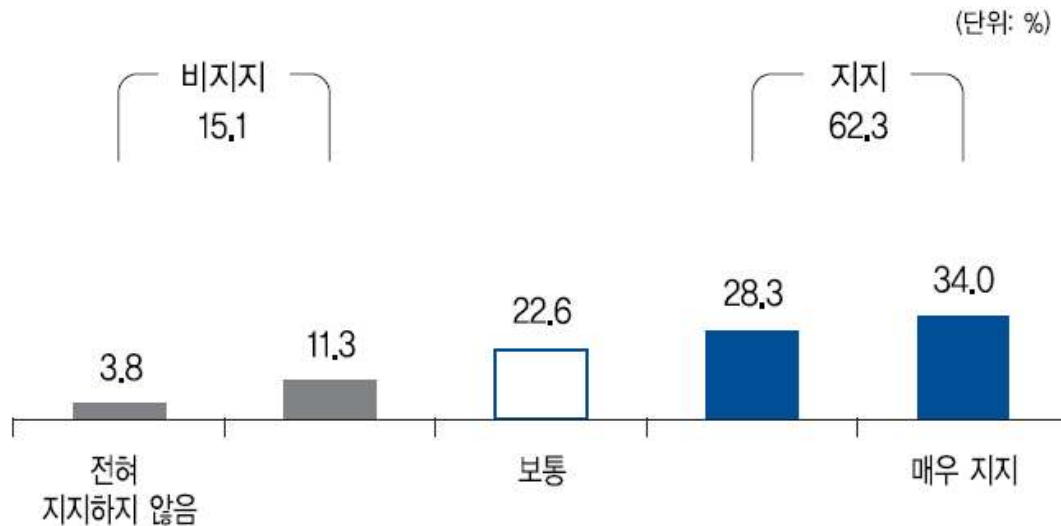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 조직 인력 확대에 대한 지지 의견>

□ 자녀양육비 ‘국가의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논의에 대한 지지 정도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의 긴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양육친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미혼 양육친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자녀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62.3% (매우 지지 34.0% + 지지하는 편 28.3%) 가 지지한다고 응답함.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5.1%임.
- 여성단체, 학자/연구자, 유관단체 소속의 조사응답자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지가 약함을 볼 수 있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공무원인 경우에서만 나타남.

- 성별간 지지 정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지지 정도를 강하게 표명한 응답자가 다수임을 볼 수 있음.



<그림 5.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논의에 대한 의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